"문틈 사이로"…가게 앞 흡연에 시민 고통 호소

연기・이물질 무단투기에 업주 체념 재떨이・별도 흡연공간 설치 어려워 "실외기 화재·빗물받이 막힘 우려" 공공 흡연부스 설치…지자체 '난색'

여름철 광주 시내 식당가에서 일부 흡 연자들의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 서 공공 흡연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대표 식당가로 꼽히 는 동구 동명동 일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은 가게 앞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꽁초와 담뱃갑 등 쓰 레기를 거리와 하수구 등에 투기하거나 흡연 도중에도 거리에 여러 차례 침을 뱉 기도 했다.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자, 보 행자들은 코를 막으며 피해 지나갔고 가 게 안의 손님들은 옥내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다.

이렇듯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은 광 주 시내 식당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광 주 금연구역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고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상 가에 흡연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실제 2023년도 광주 지역 금연구역 흡 연금지 위반 중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 료 부과 건수가 180건이었고 기타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지 도 2건, 과태료 16건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금연구역 도 횡단보도 인근 5m 등 노상의 일부분에 그치고 이마저도 자치구마다 기준이 상이 해 가게 앞 등 길거리 흡연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억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업주 입장에서 가게 내에 흡연실을 설 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게 밖에 별도의 재떨이나 분리된 흡연공간을 조성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음식점 등 의 옥외 시설물도 공중이용시설의 영업장 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흡연시 설이 아닌 곳에 재떨이를 놔둬 흡연을 유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가게 앞에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널부 러져 있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도해서는 안 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야 외 흡연실은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지 만 허가 절차 등이 까다롭고 공유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입구 등에 금연 안 내문을 부착하는 등 가게 앞 흡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동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 (24)씨는 "문틈 사이로 담배 연기가 들어 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님들의 불편이 크다"며 "꽁초 등 이물질을 버리는 경우도 잦아 청결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토로

이어 "가게 입구와 창문에 금연 안내문 과 팻말을 부착하고 흡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해봤지만, 일시적인 방편일 뿐 가게 앞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며 "지자체 차원에서 길거리 흡연을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당가 인근 주민과 이용객들은 담배 연 기와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불쾌함과 안 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규현(26)씨는 "창문 등을 통해 들어 오는 담배 연기와 음식 냄새가 섞여 식사 중 불쾌했던 적이 많다. 가게 앞에 떨어진 담배 꽁초와 가래침을 밟는 경우도 많아 찝찝하다"며 "꽁초 무단투기는 실외기 화 재와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역류현상 등의 원인이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 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 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번화가 인근에 흡연 부

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흡연자는 "대부분 건 물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 정"이라며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에서 번화가 인근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흡연부스 설치에 난색을 보이 면서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입 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며 흡 연 관련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며 "민원 접수 시 자치구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나가 계도·과태료 부과를 하 고 있지만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번화 가 흡연부스 설치 사례는 없다. 건물 시설 주 등이 허가를 통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금연 장려가 국가 시책이다 보니 시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어 려운 부분이 있다"며 "금연 정책을 활성화 해 지역 사회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흡연율은 광주 18.4%, 전남은 19.4%로 전국 평균인 1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사회 정화' 미명 삼청교육 피해자들, 국가 대상 손배 승소

1980년 비상계엄 포고 13호 불법 연행 등 인권 침해 인정

1980년대 신군부 정권 당시 '사회 정 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삼청교육대에 서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 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 교육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 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 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각기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 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 고 13호에 따라 영장 발부 없이 6만여 명 을 검거, 이 중 4만여명을 전국 26개 군부 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당시 A씨는 광주에서 경찰에 불법 연

행돼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02일간 육군 31사단·2사단에서 삼청교 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척추 협착·탈출 등 크게 다쳐 보호감 호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중 육군 31사단· 2사단, 동해사령부 등지를 돌며 삼청 교 육을 받았고 허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지난해 6월 숨졌고 B씨의 배우 자와 아들이 B씨를 대신해 이번 소송에 나섰다.

령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 지 않은 검거, 분류 심사,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보호 감호 등으로 현실화됐다. 국가 가 계엄포고에 따라 A씨와 B씨를 불법 체포・구금한 뒤 구타하거나 인권을 유린 하면서 실시한 이른바 '삼청 교육'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씨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 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함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전력으로 인해 이후 사회생활, 경제활동 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삼청교육 피해 자 C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C씨 등 8명에게 각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18세 또는 19세에 국가기관에 의해 한 달여 간 불법 구금됐 고 강제 순화교육을 받아 육체·정신적 고 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들에 의한 조직 의도적으로 중대 인권침 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 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7월 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 의 총액 금200,000,000원 중 금100,000,000원을 감 소하여 자본금 금10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 주식총수 20,000주를 10,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 였음.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 식 1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균등하게 유상소각하여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 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주식회사 원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로하로 497(동천동)

광 주 지 방 법 원 판결공시

대표이사 이 권 세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128 (2020고단6287) 사기미수등 피 고 인오태경

위 피고인은 사기미수등죄로 기 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 2024. 7. 2. 판사 김지연

합 병 공 고

㈜우리정보기술은 서기 2024년 7월 5일 주주 전 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회사합병에 관하여 ㈜유큐브가 존속하며, (주)우 리정보기술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합병기일 은 2024년 8월 9일이며, 합병비율은 무증자 합병 으로 ㈜유큐브: (주)우리정보기술 = 1: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유큐브는 ㈜우리정보기술의 교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1. 이의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10 IBC지식산업센터 B325호 ㈜우리정보기술앞 주식회사 우리정보기술 대표이사 구 용 권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사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그러지 포크는 근본이 스피시인 결에게 되는 것이 어듭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 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즐고보 이론되었다면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ᄣᆃ}。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